



북·러
군사 동맹
2면

알렉스 칼리니코프 논평
마크롱의 파괴적 전략
6면

가자 전쟁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7~9면

채 해병 사망 책임
은폐하는 권력자들
15면

프랑스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파시즘의 위협에 맞선 투쟁
4~5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려는 윤석열 정부 3면
러시아인 난민 배척하는
윤석열 16, 15면

프랑스

반나치 활동가가

말한다

국민연합

“르펜 당을 거리에서 반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사 4~5면

북·러 군사 동맹 때문에 한미일의 아시아판 나토 결성을 지지하지 말라

김영익

6월 19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양국은 상대방이 다른 국가에게 침공당하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라고 선언했다.

북-러 조약 체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간 쟁투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접해져 왔다.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덕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제공했다. 그래서 남·북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대결하는 꼴이 됐다.

러시아는 북한과 손잡아 동북아시아 지역에 관여할 여지를 키우고, 한·미·일 협력 등 미국의 동맹 강화를 견제할 필요를 느낀 듯하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삼각 협력이 아시아판 나토로 변모되고 있어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그 대응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타스 통신> 6월 18일 자)

김정은, 어제는 트럼프와, 오늘은 푸틴과

김정은은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제국주의적 상호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보며 대외 정책의 방향을 바꿔 왔다. 앞서 북한은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에 (헛되이) 기대를 걸었고, 김정은은 (메스껍게도) 트럼프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며 구애했다.

그러나 이 외교적 시도에서 낭패를 본 후 김정은은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 정권에 새로운 기회가 됐다.

북한의 무기 제공에 화답해 러시아는 경제·문화 등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다방면으로 늘려 왔다. 또한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 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반대해, 국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해당 기구가 문을 닫게 했다.

6월 20일 푸틴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에서] 블록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나토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역내 국가들에 분명 위협이다.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하고, 그리할 것이다.”

푸틴의 이번 순방 일정을 봐도 그의 의도가 보인다. 푸틴은 북한에 이어 베트남도 방문해 관계 강화를 꾀했다. 베트남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고 공들여 온 국가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중동(팔레스타인)에서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직면해 공세에 나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러시아의 동맹과 같은 반작용들을 낳고 있는 것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 양극화 압력을 가해 왔다. 한반도도 이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최근 전황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이 제공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푸틴은 이렇게 위협했다. “내가 이미 말해 왔듯이, 우리도 우리 무기를 세계 다른 지역에 공급할 권리가 있다. 나는 북한과의 조약에서도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정학 체스 게임 속에서 러시아가 서방을 향해 내민 한 수다.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은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 러시아는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및 지역 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북한이 브릭스(BRICS)나 상하이협력기구(SCO) 같은 기구에 가입할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제 북한의 처지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주도의 봉쇄로 일방적으로 고립됐던 때와 다르다. 무엇보다 핵무기 전력에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6월 16일에 낸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50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수를 90기까지 늘릴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제국주의적 갈등의 한 축(러시아)에 적극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6월 19일 평양에서 만난 푸틴과 김정은. 이들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며 유착을 강화했다

러시아도 제국주의적 갈등의 한 축이다

국내 좌파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유착을 “반제·자주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반긴다. 그러나 푸틴을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맞선 기수로 찬양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는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체첸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다진 소수 민족 억압자이다.

비록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는 크지만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다. 푸틴은 에너지 수출에서 나온 수익으로 러시아의 군사 대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조지아·우크라이나 등 자국 주변에서 서방 제국주의를 밀어내고 패권을 재천명하려고 전쟁을 벌여 왔다. 나아가 중동·아프리카 개입도 강화해 시리아에서 수많은 자국민을 살해한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서아프리카 등지에서 서방과 경쟁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러시아의 이런 지정학적 진출에는 진보적인 성격이 없다. 동북아시아에

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미국에 맞서 기성 국제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시리아 난민들의 사례처럼 수많은 민중의 고통과 죽음이 따르더라도 러시아 지배자들은 미국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와 손잡는 것을 “자주 외교”라고 포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거기에 무기를 대는 게 “반제”와 “자주”에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미·일 동맹뿐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도 또 다른 제국주의적 군사 동맹일 뿐이다. 이는 어떤 진보적 구실을 하기는커녕 동북아시아 정세도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지금 제국주의간 쟁투 격화를 배경으로 남북 두 정권이 상대방을 향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각자 경쟁하는 제국주의 열강 중 한쪽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로 예기치 못한 위험이 우리 앞에 닥칠 공산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보내려는 한국 정부

제국주의간 충돌 수위가 높아지는 데 일조하지 말라

6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평양에서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조약에 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2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은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무기 지원의 구체적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155밀리미터 포탄 등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양이 상당해, 지난 2월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유리 김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정치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이 우회 지원을 직접 지원으로 공식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은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전에 더 힘을 실어 주는 결정이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위험성을 더 키우게 될 것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급하게 필요한



한국군의 155밀리미터 포탄.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될 무기로 꼽힌다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생산량도 상당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155밀리미터 포탄과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을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공산이 있다.

심각한 탄약 부족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고전하는 이유의 하나인데, 서방의 포탄 공급이 우크라이나군 수요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군이 340만 발이나 쌓아둔 105밀리미터 포탄도 노리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러시아제 무기도 있다. T-80U 전차 등의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친숙하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對)드론 체계 등의 방공 무기 지원도 원한다고 알려졌다.

다음 달 9~11일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이에 동참하며, 한·미·일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이미 매우 위험해지고 있다. 서방 열강이 열세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다음 달부터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기로 했다.

미국, 영국은 자신들이 준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 줬다. 6월 17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렇게 말했다. “러

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이에 반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는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고 확전 위험이 커져도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푸틴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큰 실수”일 것이라며, 그러면 러시아도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려는 것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앞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비살상용’ 군수 지원으로 서방의 대리전을 지지해 줬다.

그렇게 지지를 보낸 전쟁이 지금 북·러 동맹 등으로 한반도에 부메랑이 돼 날아온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하는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그 무기는 우크라이나 땅이 더 많은 피로 물들게 할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더 위험해지는 데 일조할 것이다.

김영익

공개 토론회

레닌과 민족 문제

7월 10일(수) 오후 7시 30분

한겨레교육 703호 (서울 신촌역 6번 출구 도보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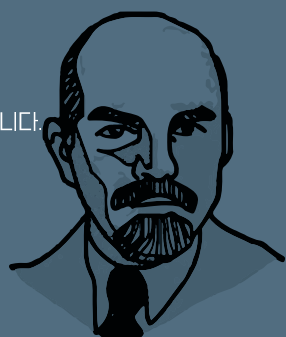
발제 김영익 <노동자연대> 기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을 제공합니다.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은 3000원)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QR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공개 토론회

인민전선

파시즘에 맞서려면
반드시 필요한 연합인가?

7월 11일(목) 오후 7시30분

흥사단 3층 강당 (서울 해와역 1,2번 출구 사이 위치)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QR

발제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장/국제연락간사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을 제공합니다.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은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862-8377 / s-east@ws.or.kr

전반적 정서는 어떻습니까? 파시스트들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디서나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모두가 파시스트 지지든 반대든 입장을 표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누구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리와 상점, 작업장, 심지어 버스를 기다리는 줄에서도 파시즘 지지냐 반대냐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것조차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것이에요.

긴장감 가득하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텔라의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안타깝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보나 과거 선거 성적으로 보나 국민연합이 30퍼센트 이상 득표할 듯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커다란 반응을 진짜로 불러일으킨 것은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조기 총선 발표였습니다. 국민연합의 집권 가능성이 실감나게 된 것이죠.

갑자기 그럴 전망이 구체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몇 주 있으면 파시스트가 총리가 되거나, 국민연합이 원내 최대 정당이 되거나, 파시스트들이 국가의 기능들을 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합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국가가 강경해지고 경찰과 국경 감시 부대가 제멋대로 날뛰는 방향으로 성큼 나아갈 겁니다.

지금의 프랑스 국가도 권위주의적이고 이슬람 혐오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민자와 무슬림들의 상황은 훨씬 나빠질 겁니다.

중대한 변화는 파시스트의 선거적 전진이 장차 파시즘의 거리 군대로 발전할 기층의 깡패들을 고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그런 변화가 확인되고 있어요.

파리, 리옹, 몽펠리에에서 극우·파시스트 단체들이 이민자, 트랜스젠더, 노동조합 활동가를 공격했습니다. 이 파시스트 깡패들은 아직 소규모이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이 거두는 성공 하나하나가 그 깡패들에게 힘을 주고, 주류 정치 영역 너머로 파시즘의 위협을 키우고, 고전적 파시즘의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그 목표란 노동자 운동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분쇄할 힘을 갖는 것이죠. 파시스트들이 전진하자 양대 민영 미디어는 즉각 극우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 기회를 넓혀 줬습니다.

그 미디어들은 이제 극우 논평가와



르펜 당(국민연합)이 승리하면 거리의 파시스트 깡패들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사진 출처: COMITÉ DU 9MAI

프랑스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프랑스에서 파시즘 위협에 맞서 싸우기

다가오는 프랑스 총선을 통해 파시스트가 의회를 장악할 수도 있다. 파리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이자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 드니 고다르가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찰리 김버에게 파시즘의 위협과 그에 맞설 희망에 관해 말했다.

국민연합에 대한 보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르텔라 같은 자들로 편성표가 가득차게 될 겁니다.

저들은 인종차별적 악선동을 쏟아냅니다. 대기업들도 태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안정”을 바라고 좌로든 우로든 “극단”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 고위 기업인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좌파보다는 국민연합이 더 낫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즉 기업주들은 극우를 포용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로 국민연합은 더 친기업적인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시스트가 전진한 구체적인 현실이 기업주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계급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저 인종차별주의자와 파시스트의 부상만이 아니라 양극화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2주 전 토요일에 65만 명이 파시즘에 반대하고 좌파 선거 연합인

프랑스 전역에서 위기감과 긴장감이 가득하지만, 파시즘에 맞서려는 사람들의 주도성도 강화되고 있다

신(新)인민전선을 지지하며 행진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다른 행진들까지 합치면 그 주말 동안 80만 명이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하는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시위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전통적인 지도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스스로 스티커나 현수막을 만들기도 해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이민자 방어 시위, 성차별이나 환경 파괴에 반대하는 행동 등 현재 벌어지는 모든 행동이 파시즘 반대와 얽히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는 파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경제적 요구로 행동에 나서지만, 자신들이 극우에 맞서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극우는 파업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할 것이기 때문이죠.

선거 연합인 신인민전선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선거 연합은 아래로부터 커다란 압력을 받은 결과로 결성됐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정치인들에게 출세나 정략에만 골몰하지 말라고 요구했죠.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커다란 위협에 맞서 단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인민전선 결성의 주요 효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있죠.

한때 선거는 무가치하고 정당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투표를 호소하는 리플릿을 열심히 반포하고 있습니다. 파시즘 반대 운동이 주는 희망과 신인민전선의 공약이 기존 사회민주주의의 “극단적 중도” 정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인민전선에 투표할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투표에 몰두하는 것은 이전까지만 해도 파시즘의 위협이란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신인민전선 지도자들은 국민연합을 그저 여느 정당의 하나처럼 취급하면서 그들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시스트를 일반적인 정치적 경쟁의 정상적 일부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노동조합들과 대부분의 좌파가 파시스트는 부유층과 기업의 편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고 폭로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들춰내야겠죠. 하지만 그것은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이민자 방어 같은 쟁점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과 대결하지 않는다면 파시즘과 진정으로 대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국민연합이 생계비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비판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다른 정당들도 죄다 형편없으니 국민연합에게 기회를 주자는 반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파시스트들은 노동계급에게 이로운 방안을 지지하는 척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신인민전선 지도자들 일부가 인종차별 문제를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 문제에서 후퇴하고 그 자신이 이민자와 무슬림을 공격하고 있어요.

신인민전선의 일원이자 공산당 지도자인 파비앙 루셀은 국경이 구멍이 숭숭 난 “체”와 같아서 이민자들을 너무 많이 들여보내고 있다며, 국경 경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인민전선에 몰두하는 것은 시위를 협소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신인민전선 지지를 거리 시위 참가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동원을 제약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파시즘에 맞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단결시키려면 우리 안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해법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지역과 모든 작업장에서 모두를 단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행동을 더 키워야지 더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 운동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남태평양 누벨칼라도니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사진 출처 Photothèque Rouge

신인민전선 지지뿐 아니라 거리에서 파시스트에 맞서는 운동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6월 15일 프랑스에서 벌어진 파시즘 반대 시위

연대하는 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신인민전선 지지 리플릿을 반포하고, 투표를 조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위에 참가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하기 위한 지역 수준의 모임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시스트가 행동을 벌이러 시장에 나오려 하면 그들에 맞서 조직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맞서자고 말이죠.

그리고 노동조합에게는 파업이 필요하다고, 파시즘 반대를 분명히 내건 파업을 하자고 촉구합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국민연합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노동조합 주변 사람 셋 중 하나가 국민연합에 투표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동조합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동이고 방대한 자원과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유인물을 반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노동자들의 조직적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가망 없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파시스트 강파들은 성장하고 있지만, 거리에 수만 명을 동원하지는 못해요. 좌파와 노동조합은 거리에 수십만 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을 동원할 수도 있죠.

국민연합이 투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직과 사회적 힘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합이 총

리 자리를 꿰찬다고 해도 현 단계에서 그것이 곧 저항의 잠재력이 분쇄됐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파시스트의 위협을 직시하되 패닉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신인민전선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투표하면 다 잘 풀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법은 사람들이 조직하고 행동하는 것에, 특히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에 있어요.

우리 핵심 구호의 하나는 “바로 지금”입니다. 기다려서는 안 되고, 기다리지도 않을 겁니다. 신인민전선은 총선 후 15일 안에, 총선 후 100일 안에 취할 구체적 조치들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컨대 최근 통과된 인종차별적 법률들을 폐기하는 조치 등은 무기한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신인민전선 지도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지 않기 전까지는 인종차별에 절대 맞서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파시스트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인종차별에 맞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초에 파시스트들이 전진할 길을 닦아 준 정책들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투쟁은 총선 개표가 끝나는 7월 8일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인민전선이 선거에서 승리한다 해도 국민연합의 선거적 위협도, 파시스트 강파들의 위협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연합은 프랑스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항의성으로 한 번 극우를 찍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극우를 찍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숫자가 커지는 것을 막고, 그 1000만 명의 지지를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거대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하는 겁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선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혁명가들은 기본적 원칙을 내팽개치기 쉽습니다. 투쟁이 투표보다 중요하고, 공동전선 활동과 함께 계급 독립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고, 노동계급에게는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원칙들 말입니다.

대중 운동 건설에 기여하면서도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명료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과거의 교훈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인민전선은 1930년대 인민전선을 의식적으로 되풀이하려 합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대한 파업, 노동자 조직, 공장 점거, 대규모 행진 같은 여러 훌륭한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결국 나치가 승리하고 나치 부역자 앙리 페탱이 프랑스 대부분 지역을 통치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손 놓고 빌기만 해서도, 1930년대 인민전선에 관한 장밋빛 기억만 되뇌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가,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많은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필요합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좌파 공격에 여념 없고
극우에는 타협하려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뉼 마크롱은 신자유주의적 “극단적 중도”[영국 마르크스주의자 타리크 알리의 표현으로, 서로 타협하며 지배계급의 이익과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중도 좌/우 정치세력들을 가리키는 말 — 역자]가 얼마나 파괴적이 됐는지를 잘 보여 준다. 7년간 대통령을 지내면서 마크롱은 위로부터 시장 친화적 ‘개혁’을 추진하고 저항을 짓밟았다. 또, 프랑스 군대를 파병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떠받쳐 준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우 위험하게 키울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제 마크롱은 파시즘 정당인 국민연합(RN)의 도전을 물리치겠다며 조기 총선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연합을 정부에 끌어들이고 의향이 있는 듯하다. 국민연합이 정부에 들어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국민연합 지도자 마린 르펜이 2027년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르몽드〉에 따르면, 이 기막힌 아이디어는 마크롱의 측근이자 중도우파 전직 상원의원 피에르 샤롱에게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조르당 바르텔라 [국민연합 대표 — 캘리니코스]에게 대형 화물차 키를 건네줄 것이다. 그런데 그는 1종 대형 면허를 딴 적이 없다. 그래서 대선을 치를 때쯤이면 그는 이미 죽은 몸일 것이다.”

한편, 〈르몽드〉에 실린 다른 기사는 마크롱이 포화를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정작 국민연합이 아니라, 허겁지겁 꾸려진 좌파 선거 연합 신인민전선(NFP)임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그 기사는 마크롱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나 이민자 문제를 두고 신인민전선을 공격할 때 “극우의 연사를 차용하며, 그

신인민전선은
지극히 깨지기 쉬운 동맹이다.
그 동맹의 두 축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프랑스 사회당으로,
후자는 프랑스 자본주의의
전통적 구성 요소의 하나다



국민연합을 정부에 끌어들이고 의향이 있는 마크롱

럼으로써 그의 적수가 옳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인한다”고 지적한다.

마크롱은 과대망상에 빠져 있기도 하다. 한 측근에 따르면, 마크롱은 나폴레옹의 최종 패배가 아닌 가장 빛나는 승리에 해당하는 일을 자기가 앞두고 있다고 믿고 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손에 잡힐 듯하다. 워털루 전투보다 더 가까이 있다. 마크롱은 진짜로 그렇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더 광범한 지배계급은 르펜을 포용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프랑스 기업주들은 너도나도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와 관계를 트고 있다. 조기 총선에서 극우와 결합할 좌파 연합이 내놓은 급진적 증세 공약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그 계기였다. 네 명의 기업 고위 임원들과 은행가들은 재원 마련 방안 없는 감세와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연합보다, 여론 조사에서 르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나타난 좌파가 기업들에 더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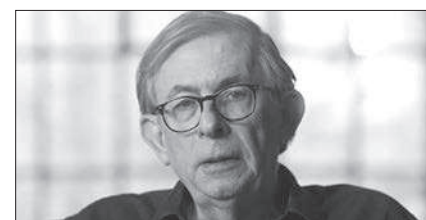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대자본은 파시스트들을 차악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대자본은 특히 신인민전선의 한쪽 날개인, 장뤼크 멜랑송이 이끄는 급진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신인민전선은 지극히 깨지기 쉬운 동맹이다. 그 동맹의 두 축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프랑스 사회당(PS)으로, 후자는 프랑스 자본주의의 전통적 구성 요소의 하나다. 마크롱이 정계에서 부상할 발판을 마련해 준 인물이자, 평판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회당 소속 전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신인민전선의 — 역자] 사회당 몫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신인민전선 내 긴장의 한 원천이다. 지난 유럽의회 선거 운동에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가자지구 사람들과의 연대를 확고하게 표했다. 선거 성적은 사회당에 살짝 뒤졌지만 여론 연구자 제롬 포케는 이렇게 논평했다. “이제 ‘굴복하지 않는’ 좌파는 대도시 노동계급 지구들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그 선거구들은 ‘굴복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반면 사회당은 확고한 친이스라엘 입장. 더 일반적으로는 이슬람혐오적인 태도를 나머지 주류 정치 세력들과 상당 부분 공유한다. 마크롱이 좌파를 공격하는 것은 신인민전선 내의 긴장을 이용해서 득을 보고, 가능하다면 신인민전선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마크롱에게 득이 된다. 첫째, 멜랑송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노동계급의 가장 차별받는 부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둘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마크롱의 선거 연합 ‘양상발’의 후보들을 7월 7일 결선 투표에 더 많이 진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합의 당선을 막으려는 파시즘 반대자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적 학자인 올리비에 로이에 따르면, “국민연합은 마크롱하에서 이미 나타난 추세를 더 두드러지게 할 뿐이다. ... 마크롱이 마린 르펜과 공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합 정부는 질적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파시스트들이 3년 후 대선에서 패배한다 해도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국가 기구들에 뿌리를 내리고 이민자와 무슬림, ‘이슬람-좌파’를 상대로 전면적인 경찰 공포 정치를 펼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저지되어야 한다.

번역 이원웅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가능성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견이 갈리다

이스라엘 정부(내각)의 위기가 점입가경이다.

6월 22일(이하 현지 시각) 토요일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네타냐후 사퇴와 바이든의 휴전 제안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그 전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리쿠드당 소속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부의장 니심 바투리는 시위대가 객관적으로 하마스를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마스의 무기는 여러 개다. 아이들을 공격하고 살해한 빌어먹을 테러리스트들의 전투 무기가 있고, 하마스를 지지하고 돕는 시위 무기가 있다.”

네타냐후는 야당 대표 베니 간츠가 사임하자 전시 내각을 해체했다.

제1 야당 예시 아티드(히브리어로 ‘그곳이 미래다’)의 대표인 아이르 라피드는 네타냐후 정부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쟁 전부터 있던 내각과 사법부의 갈등에 이어 지금은 내각과 군부 간의 갈등이 더해졌다.

이스라엘군(IDF)은 지난해 10월 7일 공격 몇 주 전에 그 계획이 이스라엘 정보 관리들에게 전해졌다는 정보 문서를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네타냐후 정부가 이 정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AP 통신은 “가자지구 전쟁 수행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부와 군 수뇌부 사이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6월 20일 자).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한 세계적 반대와 이스라엘의 동맹인 서방 국가들의 압력으로 네타냐후와 군부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의 위기가 생겨난 것이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큰 데다 특히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다. “헤즈볼라의 공격이 커지면서 레바논과 지역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더 큰 확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헤즈볼라와의 전쟁 가능성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상충된 입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한 세계적 반대와 이스라엘의 동맹인 서방 국가들의 압력으로 네타냐후와 군부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의 위기가 생겨난 것이다

장을 내놓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6월 18일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프랑스가 제안한 미국·프랑스와의 3자 그룹에 이스라엘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정책을 채택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몇몇 이스라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관리들은 갈란트의 입장을 “부정확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자신은 상충된 입장들을 절충했다.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원하지 않지만 준비돼 있다.”

네타냐후는 지난해 10월 7일 직후 요아브 갈란트 등 군부가 헤즈볼라를 선제 지상 공격하려는 것을 (지금은 전시 내각에서 사퇴한) 베니 간츠와 가디 아이젠코트의 지원을 받아 막은 바 있다. “장기적이고 복잡한 전쟁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 전직 장성 에란 오르탈은 “10월 8일 헤즈볼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6월 14일 자)

내부 투쟁

네타냐후 정부의 존속 여부, 바이든의 휴전안, 레바논으로의 확전, 가자지구의 전후 계획 등을 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요인은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분쇄하지



하마스 제거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인정하는 이스라엘 군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15일 라파흐에서 이스라엘 군인 10명이 전사했는데, 지난해 12월 이래 하루 동안 최대 전사자 수다.

개전 이래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은 662명이고, 3841명이 부상당했다. 물론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된 팔레스타인인들(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이 최소 3만 7500명이 넘는 것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전쟁 기구는 만만찮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병력 부족 때문에 이스라엘 예비군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예비군 복무 연령을 병사는 40세에서 41세로, 장교는 45세에서 46세로 연장하는 법안이다. 또, 의사나 항공 승무원 같은 전문직은 50세까지 복무하는 것으로 돼 있다(현행 49세).

이번 전쟁에 동원된 이스라엘 예비군은 이미 36만 명인데, 더 많은 생산 인구를 전쟁에 계속 붙잡아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군 복무 기간 연장 법안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대규모 반네타냐후 시위의 근저에 예비군 동원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전비 지출 증대로 인한 소비와 첨단기술 투자 위축 등 경제적 불만도 깔려 있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가한 압력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바이든의 “휴전안”을 통과시켰

다. 바이든 정부는 휴전안을 이스라엘이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 휴전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지금껏 밝힌 바 없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하마스가 휴전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비난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계획의 “1단계”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바이든 제안의 “허점”을 이용해) 학살을 재개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군대의 가자 철수와 영구 휴전을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네타냐후는 이에 응하기는커녕 하마스 제거와 인질 구출이라는 전쟁 목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6월 8일 라파흐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인질 4명을 구출했지만, 이 일은 하마스 궤멸이라는 전쟁 목표의 달성은 아직 멀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

그래서 다니엘 하가리는 하마스 궤멸이라는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하마스는 이념이자 정당이다. 이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다.”

군 수뇌부가 정부의 전쟁 목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시온주의자들의 상호갈등에 환상 갖지 말고 다만 그것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더욱 키우자.



한국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서울 도심에 기세 있게 행진한 6.23 집회 참가자들

6.23 팔레스타인 연대 전국 집중 행동 2000여 명의 시위대가 투지와 연대의 희망을 보여 주다

6월 23일 일요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전국 집중 행동의 날이 열렸다.

2000여 명이 참가해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날 집회에는 종교, 민족, 인종, 언어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그런 다양한 참가자들을 위해 이날 집회에는 한국어·영어·아랍어·벵골어·인도네시아어 다섯 언어의 통역이 제공됐다.

집회 사회를 맡은 팔레스타인인 나리만 씨(사진)는 연단에서 자랑스럽게 외쳤다.

“오늘 이곳에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인천, 수원, 원주, 춘천, 연천, 파주, 안산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온 지역이 언급될 때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깃발과 손팻말을 흔들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환영의 박수와 합성을 보냈다. 이날 집회가 실로 전국 각지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결집한 자리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간 대학교 캠퍼스에서 텐트 농성과 캠페인으로 연대 확산을 위해 노력한 미국인 유학생 제이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집회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정점입니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일에 함께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집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집회 장소는 여러 가지 부스 행사와 일찌감치 온 참가자 수백 명으로 북적였다.

다양한 손팻말과 집회 물품, 팔레스타인 깃발 모양의 부채, 스티커와 배지를 나눠 준 메인 부스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길을 지나가는 여러 시민들이 이 부스에 들러 모금하거나

응원의 말을 전하고 가기도 했다. 공식 후원 곳즈인 팔레스타인 연대 티셔츠도 인기 만점이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디자이너들의 예술 작품 부스, 페이스 페인팅 부스, 비즈 공예품과 손팻말을 직접 만드는 부스, 이주노동자 참가자를 위한 무료 노무 상담 부스 등 다채로운 연대 활동이 펼쳐졌다.

나눔문화 설립자인 박노해 시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연대 시 두 편 ‘나 거기 서 있다’와 ‘꽃을 던진다’도 전시됐다. 이번 집회에는 예수살기 최현국 목사와 오수연 소설가도 연대 메시지를 보내 줬고, 오수연 소설가는 집회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모은 지지 메시지가 가득 붙은 일곱 개의 커다란 판을 세웠고, 어떤 외국인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학살로 희생된 팔레스타인인들을 기억하는 사진들을 전시했다.

길 한편에서 무슬림 참가자들이 메카 방향을 향해 기도를 하자, 그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터번을 두른 시크교인들이 주변을 지켜 줬다.

“정말이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참가했어요. 거의 하나의 세계 같아요.” (일본인 참가자 엔도 씨)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인 살레흐 씨도 벅찬 감정을 이렇게 전했다. “어찌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파괴와 좌절 속에서 희망을 심어 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조직자들과 활동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적이 아니다

집회 연단에 오른 발언자들은 벅찬 감사와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며 투쟁과 연대의 중요성을 외쳤다.

팔레스타인인 나심 씨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속적인 연대와 저항을 호소했다.

“시온주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이 시대의 모든 기술을 학살과 파괴를 위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를 거쳐 이곳 한국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10월 100여 명의 시위로 시작된 이 운동은 시위, 강연, 토론회, 대학 농성 등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랍 정부들과, 이른바 국제 인권 단체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거둬 배신[했지만] ...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지지하고 불의를 거부하는 여러분이 가자



사회를 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



팔레스타인인 나심 씨와 마리아 씨, 대학생 이시현 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일부인 어린이들

지구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야만적 침략을 끝내고 해방을 쟁취할 때까지 멈추지 맙시다. 곳곳에서 인티파다(항쟁)를 일으킵시다!”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인이자 울산에서 활동해 온 마리아 씨가 마이크를 잡자 큰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팔레스타인에서 목숨을 잃은 3만 6000명의 영혼은 결코 스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호 속에, 외침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쟁취한다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 덕분에 오늘 날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 변화를 이뤄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고 투쟁합시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을 불러오는 것처럼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6주 동안 학내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텐트 농성을 한 서울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의 이시현 씨도 발언했다.

이시현 씨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스라엘과 그 동맹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분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철용성이 아님을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지와 세계적 연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시현 씨는 미국의 위선적인 휴전 제안도 규탄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세 차례나 휴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바이든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생

명과 고통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무장 해제시켜 중동 지역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굳히는 데나 관심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불의와 학살에 맞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팔레스타인인이다!”

집회가 끝나고 사회자가 거리 행진을 호소하자 참가자들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박차고 일어섰다. 1500여 명으로 불어난 대열 선두에서는 17명의 ‘촛불 풍물단’이, 대열 곳곳에서는 북을 치는 이집트인들이 행진의 열기를 돋웠다.

“We are all Palestinians(우리 모두 팔레스타인인이다!)” “Israel, terrorist(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을 지날 때는 구호 소리가 특히 커져서 청계천을 찌렁찌렁 울렸다. 휴일에 도심으로 나들이 나온 행인들과 관광 나온 외국인들이 환호하며 대열에 속속 합류했다.

인사동길에서 행진 대열을 우연히 만난 한 아랍에미리트 여성 관광객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본지 취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끄럽게도 팔레스타인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니 반갑고 눈물이 많이 납니다.”

대열이 종로를 지나 인사동길로 들어가는 동안 ‘팔봉이’(자원봉사자)들은 행인들에게 리플릿을 반포하고 손팻말을 건넰었다. 행진 대열을

배경 삼아 ‘인증샷’을 찍던 관광객들과 한국인 행인들이 그런 따뜻한 호소에 행진에 합류하기 부지기수였다.

인사동길에서 200미터 넘게 걸어진 대열은 그 길을 빠져나올 때 2000여 명으로 불어 있었다.

행진 대열은 미국 대사관 앞을 지나며 “Joe Biden, terrorist(조 바이든이 테러리스트다!)”를 우렁차게 외쳤고, 광화문사거리를 거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으로 돌아왔다.

행진 마무리 지점에서 대열은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나리만 씨는 “바로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제 가족, 친지, 동포들의 희망”이라고 했다.

“우리는 8개월 넘게 이 연대 운동을 함께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가자지구 학살이 멈출 때까지 우리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의 연대는 계속됩니다. 서울에서는 토요일(6월 29일) 오후 2시에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일요일(30일)에는 울산에서, 그다음 주 일요일에는 부산·인천·수원·원주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고, 함께 이 집회들에 참가해 주세요!”

이날의 집회와 행진은 지난 8개월간 기층에서 건설돼 온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호소처럼, 전국 각지에서 연대를 더 힘차게 건설하자.

김승주·김준호·이재혁

시위대가 말한다

그간 연대 확대에 열성을 다하고 이날 집회를 끝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미국인 유학생 제이다 씨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제가 한국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제 고향에서 벌어지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으로 가져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열정적인 동지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한 필리핀인 공동체 카사마코 조직자이자 목사인 에드윈 씨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이런 집회가 열릴 수 있는 데에 감사합니다. 한국에도 인종 학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집회에 참가한 압둘라 지즈 씨는 “SNS에서 영상으로만 보던 외국의 행진 같은 모습을 한국에서 볼 수 있었다”며 “또 이런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벅찬 감정을 전했다.

1980년대 반독재 운동 때부터 시위에 참가해 온 박제현 강원민주재단 홍보위원장도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다.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광화문에서 수많은 투쟁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 광화문에 팔레스타인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벅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 함께하는 젊은이들과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연대 운동을 계속 이어가자

이날 처음으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도 많았다. 한 방글라데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이 시작된 이래로 인터넷에서 줄곧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행진해서 정말이지 가슴이 벅칩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동에 계속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함께 팔레스타인 해방을 이뤄 내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파키스탄계 샤히드 아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시위에 처음 참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정말 기뻐합니다. 나이와 종교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자지구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류애를 발휘해 주셔서 정말 벅칩니다.

“이를 계속 이어 가야 합니다. 인종 학살이 멈출 때까지 우리 모두 이 운동에 계속 참가합시다.”

혁명과 해방

—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계기로 살펴본다

제국주의와 시온주의 세력을 분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 체제를 분쇄하고 사회를 새롭게 재건할 만큼 강력한 세력이 하나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학 행위는 이 체제가 얼마나 악랄한지를 보여 준다. 시온주의와 제국주의는 경쟁과 정복, 이윤으로 작동되는 체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적들과 맞닥뜨린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대결하는 이들은 최첨단 살인 기술로 무장하고 서방 강대국들의 지지를 받는 국가와 대결해야 한다.

그러나 시온주의와 식민주의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투쟁은 더 커다란 과제 중 하나다.

그 과제란, 어떤 경우에도 멈출 생각이 없는 자들을 멈추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환경 파괴를 통해 인류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아무리 탄원해도 우리 지배자들은 그들의 방법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쟁과 국가 간 대립으로 세계는 전쟁과 충돌이 빈번해졌고, 오늘날에는 핵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체제가 달라지지 않는다.

지배계급의 권력은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주되게 달려 있지 않다. 그들의 진정한 지배력은 이 사회의 경제를 움직이는 수단들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힘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어떠한 정당에 투표하건간에 이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경찰, 장성, 밀정과 감시로 굴러가는 국가 구조도 마찬가지다.

“사회주의 운동과 사상의 역사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구별은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아래로부터 강력한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1987~1993년 1차 인티파다

파업권, 집회의 자유, 노동조합과 운동 단체를 결성할 권리, 투표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사회의 다수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민주적으로 장악하고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헬 드레이퍼는 이것을 이를 방법을 나누는 핵심 변별점이 다음과 같다고 썼다.(드레이퍼는 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투쟁들에 참여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사회주의 운동과 사상의 역사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구별은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다.”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에는 국회의원들이나 무장한 투사 집단에 의존하기, 또는 지배계급의 일부에게 이성을 찾으라고 설득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각각의 접근법이 매우 상이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미 지하드의 지도자와 분명 같지 않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징이 하나 있다.

드레이퍼는 그들 모두가, 노동계급이 자주적 행동에 기초해 사회를 재창조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런 잠재력을 적대시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는 “각성하고 행동으로 나서는 대중의 자력 해방을 통해서만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그런 대중은 “해방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려 하고,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투쟁에 ‘아래로부터’ 참여하고, 역사 무대에서 (단지 대상이 아니라) 행위 주체로서 움직여야” 한다.

시온주의에 맞선 투쟁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식으로 수백만 민중이 대규모로 참여한다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특별히 해악적인 이변종만을 타도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민족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투쟁이 임금과 평등을 위한 투쟁, 여성 억압과 LGBT 억압에 맞선 투쟁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혁명이다. 혁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해방을 쟁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러는 가운데 평상시에 그들을 억압하던 모든 족쇄를 벗어 던지는 것이다. 우리의 적들은 한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이 더 폭넓은 투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 한다.

10월 20일에 이스라엘군은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맹렬히 비난했다. 툰베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가자지구에서 “인종 청소”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툰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세계가 소리 높여 즉각적인 휴전과, 팔레스타인 등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들을 위한 정의와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 대변인 아르예 샤루스 살리카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레타와 일체감을 갖는 이는 테러 지지자로 볼 수밖에 없다.”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

우리 지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강요된 분열을 극복하고, 우리의 증오가 진정한 범죄자들인 부자들과 그 동료 정치인들로 향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학살자들로부터 [화석연료 기업] BP, [영국 총리] 리시 수낙까지 포함되는 저들의 단결에 맞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과 가난한 이들이 혁명적으로 단결해야 한다.

카를 마르크스에게 혁명은 “역사의



2011년 이집트 혁명에 참가한 시위대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기관차"다.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시대인 오늘날, 혁명은 그 열차의 승객들(즉 인류)이 비상 브레이크를 걸려는 시도라고 했던 1930년대 마르크스주의자 발터 벤야민의 말에도 마찬가지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 없이는 위대한 승리조차도 뒤집힐 수 있고, 자유에 대한 약속이 내동댕이쳐 질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들은 약 45년 동안 장엄하고 영웅적 투쟁을 지속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타도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희생과 용기로 그것을 해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새로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지속됐기 때문에 끔찍한 인종 억압과 지독한 가난은 그대로 남아 있다.

오늘날 중동에서는 혁명이 가능할까?

지배계급에게 가장 강력한 대항 세력은 조직된 노동계급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 제고를 중단함으로써 이윤의 원천을 차단하고 사장들의 권력에 도전한다.

2019년에 시작된 수단 혁명의 절정은 대중 시위와 풀뿌리 조직들과 동맹해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섰을 때였다.

노동자들이 사회의 소수일 때조차 그들의 강력한 투쟁은 모든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농민과 피억압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들이 사회의 소수일 때조차 혁명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민족들의 투쟁을 이끈 1917년 러시아 혁명의 핵심 교훈이 이것이다.

2021년 5월 팔레스타인 총파업에서는 전투적 거리 운동과 노동자들의 행동이 강력하게 단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총파업이 있기 10년 전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동에서 반란이 파도처럼 몰아치며 대중 파업과 시위 그리고 마침내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혁명들은 패배했다.

혁명의 성공 여부는 노동자 운동의 의식과 조직 수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지도가 제공되는지에 달려 있다.

혁명적 폭발로부터 수혜를 입는 정치 세력이 애초에 그런 폭발을 억제하려 했던 자들인 경우가 종종 있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의 경우, 거대한 대중 운동이 일어나 30년 동안 지배해

온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과 대결했다.

거리 시위와 광장 점거가 노동자 파업들과 결합됐다.

그러나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들이 서로 맞물리면서도 둘 사이의 분리는 진정으로 극복되지 못했다.

극복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는 서로 다른 혁명적 조류들을 한데 모으려 애썼다.

RS는 무바라크가 타도된 후 노동자 정부를 세우고, 또 낡은 구조들을 모두 일소하자고 주장했다.

RS는 정치적 변화에서 멈추지 말고 경제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자유, 그리고 팔레스

타인 민중들과의 실질적인 연대를 위해 싸웠다.

RS는 의회의 비민주성에 도전하기 위해 노동계급 사람들이 참여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대안적 토론회들을 건설하려고 했다.

이것이 2011년 격변이 몰아치던 이집트 혁명에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가 뜻하는 바였다.

그러나 RS는 규모가 너무 작았다. 마치 제1차세계대전 말미에 독일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로자 룩셈부르크의 공산당이 너무 작았던 것처럼 말이다.

이집트와 독일 두 경우 모두에서 혁명 과정을 지배한 것은 개혁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노동자 조직을 약화시키고 자본주의와 그 국가 구조를 공고히 하려 했다.

혁명가들이 더 큰 규모를 갖추지 못했고, 또 단결된 노동자 운동이 없는 조건에서 대안적 사상이 반혁명 세력에 맞서 널리 확산될 수 없었다.

본지가 단지 혁명을 선동할 뿐 아니라, 혁명 정당을 건설해 대중적으로 폭발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힘을 하나로 모으고, 조직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저임금, 인종주의, 전쟁, 성차별,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체제를 겨냥하는 투쟁에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러한 집단적 분노가 체제 타도를 향하도록 한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위해 싸우고, 팔레스타인 억압의 원인이자 이를 지속시키는 체제에 맞서 투쟁한다는 것이다.

1850년 카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자동맹 안에서 논쟁하면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뿐 아니라, "정치적 지배자가 되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도" "15년, 20년 어쩌면 50년"의 중대한 투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명이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께 말할 생각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혁명을 건설하기 위해 시급히 투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에 바로 지금 가입해야 한다.

차별 반대가 아니라 노동계급 문제에 집중하자?

바겐크네히트 노선은 좌파가 지지할 정치가 아니다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독일의 자라 바겐크네히트의 신생 정당 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가 5.7퍼센트를 득표하며 유럽의회에 진입했다.

바겐크네히트(사진)는 오랫동안 좌파당 디링케의 원내대표로 활동해 온 인물로, 지난해 말 좌파당에서 분당해 BSW를 창당했다.

바겐크네히트의 정치는 흔히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곤 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차별 문제 등 사회적으로는 보수적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뒤에서 서술하겠지만 경제적 쟁점에서도 바겐크네히트는 그다지 좌파적이지 못하다.) 바겐크네히트 자신도 BSW의 정치를 “보수적 좌파”라고 규정했다. 바겐크네히트는 이런 주장을 펴면서 종종 마르크스를 아전인수 격으로 끌어다 쓴다.

최근 저서 《독선자들》(2021, 국내 미출간)에서 바겐크네히트는 오늘날 좌파가 ‘위크’(차별 문제에 민감할 것)를 요구하고 “기괴한 소수자” 정체성 정치를 지지하는 데 골몰하느라 전통적 지지층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라이프스타일 좌파”는 진정한 좌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내에서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과 장석준 정의당 정책연구소 전 소장 등 중도좌파 자유주의자들이 위크를 비판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듯하다. 장석준 전 소장은 바겐크네히트의 저서 《풍요의 조건: 자본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법》(제르미날, 2018)을 우호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바겐크네히트의 주장은 차별 문제와 계급 문제를 양자택일로 대립시키고, 차별 반대 운동(서구에서는 특히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기피하는 것이다. 파시즘 반대 운동의 대전제인 인종차별 반대를 회피함으로써, 독일에서 파시스트 정당이 성장하는 것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효과를 낸다.

실제로 바겐크네히트의 정치에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이주민에 대한 견해다. 바겐크네히트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해 동안 극우를 막는다는 이유로 극우의 인종차별에 타협해 왔다. 부메랑 던지기인 줄 모르고 말이다.

바겐크네히트는 ‘과도한’ 이민자 수



좌파가 인종차별에 타협하는 것은 파시스트를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 뿐이다

용이 ‘부족한’ 자원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낳아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파시즘을 중핵으로 품고 있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고국에서 교육받고 일하는 것이 이주민 자신과 그 나라에도 더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토박이와 이주민으로 노동계급 내부를 이간할 뿐 아니라, 인종차별(과 극우의 성장)의 책임을 그 피해자인 이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고약한 주장에 문을 열어 준다.

헤인 데 하스는 이주민을 위해 이주민 유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이렇게 일갈한다. “너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라는 투로 거들먹거리는 태도[다.] ... 이주자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실제 스스로 판단한다.”(《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세종서적, 2024)

바겐크네히트의 타협은 인종차별을 좌파적으로 포장해 줌으로써 그럴듯한 주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인종차별주의 극우와 파시스트를 더 기세등등하게 만든다.

또, 체제가 아니라 피해자 탓하기를 함으로써, 인종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극우와 파시즘을 (제약하긴커녕) 키워 주는 데 일조한다. 최근 유럽이 인종차별을 주요 무기로 삼는 극우와 파시즘이 크게 성장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보자면 이것은 각별히 문제적이다.

오늘날 다른 곳에서도 좌파가 이주민·난민 문제를 놓고 나쁜 입장을 취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긴축을 강요하고 난민을 박해했고, 프랑스의 신인민 전선 안에서 뿔랑송은 공산당의 이슬람 혐오와 애국주의에 타협했다. 영국의 조지 갤러웨이드 바겐크네히트와 비슷한 주장을 펴다.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총선에 울산 동구에서 출마한 민주노동 후보 이장우 후보(노동당 소속)는 조선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조선업 이주 노동자 확대에 반대했다.

계급 환원론

포퓰리즘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만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제주의를 이상주의로 치부하니 토박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해 조건을 개선하고 민족주의를 극복할 가능성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바겐크네히트처럼 노동계급의 문제가 중요하며 인종차별을 용인하는 것은 소탐대실이고 결국 제 살 깎아 먹기이다. 레닌은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1915)에서 “근시안적이고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장기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기회주의라고 지적했다.

바겐크네히트는 독일에서 백인 노동계급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지만 인종차별은 노동계급의 상당한 소수가 겪는 문제이고(독일 노동계급의 4분의 1이 이주민 배경을 가지고 있다), 차별이 심해질수록 이주 노동자뿐 아니라 토박이노동자의 조건도 악화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차별은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조건 개선을 위한 단결된 투쟁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미국에서] 흑인 노동자가 사슬에 매여 있는 한은 백인 노동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레닌도 이렇게 강조했다. “억압과 차별이 어디서 나타나든, 어떤 계층이나 계급의 사람들이 억압과 차별에 시달리든 간에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

차별은 착취를 강화한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계급 단결을 위해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차별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급투쟁임을 주장해 왔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계급 중심성은 바겐크네히트의 조잡한 경제주의(계급 환원론)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바겐크네히트가 “경제적” 문제에서 진정으로 좌파적인 것도 아니다. 좌파라면 자본주의에 반대해야만 한다.

그러나 바겐크네히트는 오늘날 자본주의를 (성과·책임·경쟁에 바탕을 두지 않고) 세습과 특권으로 운영되는 “경제 봉건주의”라고 규정한다. 주적은 콘체른(Konzern, 독일식 재벌)과 주식회사라는 것이다. 이를 해체하고 “소유권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자는 것이 그의 대안이다.

이는 한국의 재벌 해체(개혁)론과 매우 흡사한 주장이다. 그러나 재벌 해체는 자본의 집적·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공상일 뿐 아니라, 자본의 관계망(즉,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자본의 특정 조직형태(소유·지배 구조)를 문제 삼는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은 흔히 도시와 농촌의 중간계급과 연대하기 위해 자본주의 자체와 대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끌린다.

그래서 바겐크네히트는 아예 이렇게 말한다. “독일에서 중요한 것은 대기업에 대항하는 중소기업의 강력한 블록인 미텔슈탄트(Mittelstand)다. 그것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양극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요컨대, 바겐크네히트는 사회민주주의 방식으로 독일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에 타협하는 문제에서든 경제적 대안에서든 바겐크네히트의 정치는 좌파가 지지할 만하지 않다.

성지현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②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

우선 용어 사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부와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인처우법에 아예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

이런 용어법에는 자신들의 국경 통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강한 증오가 서려 있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반사회적이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집단처럼 보이게 한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해 법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데도 용이하다.

따라서 UN 국제이주기구 등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2만 명을 단속했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2개월 반 동안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질 낮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는 한편,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을 벌이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세습

M과 J는 부부로 내가 처음 만난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필리핀 출신으로 D-1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D-1 비자는 문화예술 비자라고도 하는데 M의 페이스북 사진을 보면 그는 기타리스트를 꿈꿨는지도 모르겠다.

M과 J는 체류 목적과 기간을 넘겨 공장장에서 오래 일했다. 부부는 한국에서 아이 둘을 낳았고, 처음 상담했을 때 아이도 함께 왔다.

10년을 넘게 한 공장장에서 일했는데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들이 “불법”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노동력이고,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인데 “불법”인 노동력이 있을까?



전면 합법화하라 2004년 미등록자 단속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들

다행히 자신의 웅색한 ‘신념’만 내세우며 노동법에 무지한 사용자 덕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상당한 금액이 입금됐던 날 그들이 기뻐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부부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불리운다.

우리는 명백한 사회적 신분인 “미등록”이 세습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부모가 미등록이면 아이도 미등록이다. 이주아동들은 공교육에 편입될 수 있지만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미등록 아동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성장하게 된다. 참으로 체계적인 국가의 미등록 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B는 베트남 출신으로 20대 초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다. B는 D-4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D-4 비자는 유학 비자라고도 하는데 경기도 한 대학교에 유학생으로 들어왔다. D-4 비자는 근로시간이 제한돼 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해 미등록 신분이 됐다. 그에 따르면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했다.

대학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는 한 강사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유학생들은 대부분 졸거나 집중을 못한다고 한다. 학비, 생활비 등을 위해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당국의 돈벌이와 정부의 출입국관리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미등록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B는 서울 번화가 술집에서 1주일에 하루 쉬면서 매일 야간을 포함해 12시간을 일했는데 임금도 체불되고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사용자는 임금 체불은 인정했지만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근거가 B가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A와 I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건설노동자이다. 이 둘은 경기도 한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했다. 1개월 반을 일하고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다가 미등록이 된 경우다.

이들의 경우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도 없었다.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사례다. 사용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해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고, 급여도 현금 지급하는 등 체불 근거를 남기려 하지 않는다. 물론, 사용자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과태료 등의 패널티가 있지만, 단속만 피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계산하는 것이다.

수감

고용지청 진정 중에 A가 주말 심야에 전화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단속당해 ‘보호소’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눌한 한국어로 그 시간에 전화할 곳이 나밖에 없었을 것이라.

그런데 ‘보호소’라고?

나는 지역 가톨릭 이주노동자센터의 긴급호출을 받고, 공장장에서 일하다 단속당해 구금된 베트남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부를 ‘보호소’ 안에서 접견한 일이 있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공장에 들이닥쳐 일하는 노동자들을 공장 마당에 몰아넣어 앉혀 놓고 일일이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했다고 한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굴욕적이었을까. 이런 단속 방법은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젊은 부인은 계속 울고 있었다. 범죄자도 아닌 이들의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이들에게는 4살 아이가 있었다. 부모가 모두 잡혀 와 바깥에서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이다. ‘보호소’라지만 보호가 아닌 감금일 뿐인 것이다.

내가 수임했던 사건 중에는 난민 신청자였다가 미등록이 된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건도 있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있어 이주노동자의 용광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출입국 통제에서 한 곳이라도 비껴가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건을 하면 사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개들은 불법이라 퇴직금을 안 줘도 돼”, “개들은 불법이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이다. 2000년대 중반 이주노동자 집회와 행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구호로 이에 답한다. 우리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전면 합법화돼야 한다. 야만적인 단속·추방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⑧

혁명 이후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 우리가 감 나라 배 나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혁명으로 탄생한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에 관해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블라디미르 레닌은 혁명의 경험을 살펴보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 국가”, “노동계급의 지배”를 말한 바 있다. 둘은 주로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와 비슷한 다른 표현을 쓰기도 했다.

오해를 많이 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그런 표현의 하나다.

중요한 점은, 이 표현의 속뜻이 민주주의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민주주의를 전제한 표현이다. 노동계급은 아래로부터 조직된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짓누르는 “부르주아 독재”, 즉 자본 지배의 반대말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자본에 대한 독재를 조직해 자본주의 독재를 대체해야 한다.

19세기 이래로 수많은 혁명가들은 혁명을 한 줌의 헌신적 지도자들이 민중의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런 사람들이 혁명적 독재를 해, 민중이 권력을 나누어 받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민중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봤다.

반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런 식의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에 반대했다.



사회주의를 구현할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와 자치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둘은 사회주의를 쟁취할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와 자치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봤다.

지난 연재에서 다뤘듯, 노동자 국가라면 혁명을 수호하고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손에 있는 생산 수단을 빼앗아 와야 한다. 이는 구체제의 자본주의 독재에 맞서 다수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레닌은 이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집약했다. “압도 다수 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그 대중을 착취·억압하는 자들을 힘으로 억압하기(즉, 민주주의에서 배제).”

이전 모든 계급 사회에서는 소수가 다수를 착취했고, 그 소수는 국가를 통해서만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수인 계급이 사회를 통제한다면 착취도 끝날 것이고, 강제력이 더는 사회 구성 요소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형태의 국가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계급이 없어지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레닌은 계급과 착취가 사라지면 국가도 “사멸”할 것이라고 썼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자유는 없다.” 레닌은 이렇게 썼다. “자유가 있는 곳에 국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차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공산주의 사회다. 공산주의 사회는 그 자체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사회에는 “경제·윤리·지성 등 모든 면에서 그 사회를 낳은 옛 사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보다 크게 우월한 점이 하나 있을 것이다. 바로 개개인이 그 자신이 만든 생산물과 맺는 관계가 변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생산물을 집단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사회 모든 면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어서 마르크스는 생산이 사회적·개인적 필요에 따라 발전하면서 인류가 자신의 인간성을 발달시키기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풍요가 만개하면 개인 간의 경쟁과 그것이 낳는 모든 부산물이 철폐될 것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누구나 “모든 영역에서 성취를 거둘” 수 있는지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사회가 전반적인 생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내일은 저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냥꾼이나 어부나 목동이나 비평가가 되지 않고도 마음 내키는 대로 오전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에 소 떼를 치고 저녁 식사 후에는 비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할 만한 더 나은 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 그 자체는 더는 벗어나 고픈 족쇄가 아니게 될 것이다. 노동은 마르크스의 표현처럼 “삶의 최고의 갈망”, 필요한 일이자 동시에 사람들 간의 관계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마르크스가 말한 “선사(先史)의 끝”이자 진정한 인류 역사의 시작일 것이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여덟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 글에서는 선거가 변화를 이룰 수단일지에 관해 다룰 것이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6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채 해병 죽음 1년이 다 돼 가는데

권력자들은 변명과 책임 은폐에만 열심이다

김문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7월 4일 종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채 해병 사망 1주기(7월 19일) 전에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6월 2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입법청문회는 크게 주목받았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수사 외압의 핵심 계선에 있던 인물들이 증인으로 불러 나왔기 때문이다. 참사의 직접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도 나왔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았다. 윤석열의 지시 의혹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입을 다물고, 자신의 책임 문제는 변명했다. 윤석열의 지시를 전파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기훈은 윤석열의 격노 설을 묻는 질문에 국가 안보라 밝힐 수가 없다고 답해 실소를 자아냈다.

이종섭·신범철·임성근은 증인 선서조차 거부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증인 선서를 하고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돼있으므로 증인 선서 거부하는 청문회에서 거짓



부하 사병이 자신들의 지휘에 따라다가 사망한 사건인데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며 책임을 뭉개고 있다

말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부하 사병이 자신들의 지휘에 따라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고 권력자를 위해서 사병의 죽음 따위, 진실이나 책임 따위는 감추고 뭉개도 된다는 것이다.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 주도록 훈련되는 존재”(임성근의 말)라고 말했을 때, 채 해병 같은 평범한 시민은 그들의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석열이 핵심 수사 대상

임성근을 혐의자로 포함시킨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임기훈-유재은-경북경찰청 순으로 통화가 이뤄진 것이 이날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그날 윤석열은 이종섭, 임기훈, 신범철과 통화했다.

수사 외압 의혹에서 윤석열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는 혐의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채 해병 문제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잇따라 훈련병 사망 사고들이 터지면서 여권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한 한동훈이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겠는가.

윤석열 최측근 출신자의 이런 발언은 또한 여권의 자중지란을 보여 준다. 나경원, 원희룡 등 당대표 경쟁자들은 일제히 한동훈을 비판했다.

물론 한동훈이 개과천선한 것은 아니다. 그의 뒤는 발언의 본질은 특검법이 이번에 통과되는 것을 지연시키려는 시간 끌기다. 또한 한동훈은 그저 윤석열과 차별화하는 이미지를 챙길 속셈이다.

여권의 난맥상은 채 해병 특검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로 (제대로) 지목되고 있는 데다가, 사고 발생 1년간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는 한 달 전 서울 도심의 특검 촉구 대중 집회가 컸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2주 연속 수만 명이 참가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이번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돼야 한다. 물론 윤석열의 거부권 장벽이 남아 있다.

따라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면 국회와 민주당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더 큰, 개방된 대중 동원이 이뤄져야 한다.

▶ 16면에서 이어짐

한국에서 러시아인 난민의 고통: 쫓겨나거나 나쁘거나

징집을 피하려는 러시아인 청년들은 급하게 러시아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하기도 하고, 전쟁 발발 전부터 한국에 머물다가 귀국하면 징집될 것을 우려해 난민 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한국 정부의 국경 통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2022년 10월 총 5척의 러시아발 요트가 포항과 속초 등에 입국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다. 요트에는 모두 합쳐 26명의 러시아인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징집 회피 목적의 입국 시도가 의심된다며 단 6명만 입국을 허가했다. 6명은 40~50대로 징집 대상보다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해 12월에는 러시아인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이 MBC 보도로 알려졌다.

소환장

당시 석 달째 억류 중인 사람도 있었다. 공익 변호사 단체 ‘어필’ 등 난민 지원 단체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벌인 끝에, 이들 중 3명만이 지난해 6월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은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쫓겨난 경우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힘겹게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어도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다. 법무부는 여태 이들의 난민 심사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한 명인 A 씨는 6개월간 일자리 없이 지내다가 현재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다. 몸에 이상이 생겼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비싼 치료비를 내야 하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마땅치 않아 휴대전화 개설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6월 19일 자)

이런 어려움은 한국에 머물던 중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들은 징집 소환장 등 징집을 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얻기도 어려워, 까다로운 난민 심사

를 통과하기가 더욱 요원하다.

또, 출국을 거부하며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돼 있는 러시아인 난민들도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은 현재 러시아인 난민 3명을 면회하고 있다고 한다. 벌써 1년 넘게 구금돼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무허가 어업을 했던 것 때문에 러시아로 돌아가면 감옥에 가거나 징집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금과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귀국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러시아인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하며 러시아인 난민 배척하는 윤석열

한국산 폭탄 맞고 죽으라는 전가

임준형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러시아인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까지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서야 한 러시아인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2021년에 한국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러시아인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1038건으로 4위, 지난해에는 575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난민 신청 건수의 31퍼센트에 해당하며, 두 번째로 많이 신청한 우즈베키스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러시아인의 누적 난민 신청 건수 6878건에 거의 맞먹는 수치다.

올해 1~5월에도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2083건에 달해, 같은 기간 총 난민 신청 건수의 약 26퍼센트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이 신청한 중국인(922건)과의 격차도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은 이들이 대부분 징집을 피하려는 사람됨을 시사한다.

윤석열 정부는 '병역 기피'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동맹?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그야말로 양국 청년들에게는 '도살장'이 된 지 오래다. 특히 러시아 청년들의 경우, 불의한 전쟁에서 헛되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이 난민을 신청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백분 이해되고 공감되는



확전에 일조할 무기 지원 2023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집회

일이다.

게다가 이 불의한 전쟁에는 윤석열 정부 자신의 몫도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러시아 모두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더 확대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동유럽 국가들과 미국으로 무기 수출에 열을 올려 왔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맺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려고도 한다. 러시아인 난민들이 징집을 피하지 못하면 바로 그 무기에 희생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서방 제국주의의 강대국들에 협력해 이득을 얻으려 하면서도, 그 희생자인 러시아인 난민의 유입은 정치적·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며 억누르려 한다.

법무부는 러시아인 난민들의 입국을 막으며 "향후 징집을 피해 난민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국행을 고려하는 난민들에게 한국으로 오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인 난민의 입국은 전혀 줄지 않았다. 유럽연합의 국경 단속으로 해마다 수많은 중동·아프리카



문전박대 2022년 12월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는 러시아인 난민

출신 난민이 지중해에 빠져 목숨을 잃듯이, 난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지속되는 한 국경 통제 강화는 난민의 고통만 키울 뿐이다.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년 6개월째 구금돼 있는 러시아인 난민 T 씨는 한국으로 온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인권이 공허한 울림에 그치지 않으며 정보기관이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시민들을 박해하지 않는 민주국가로서의 이 나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가치 동맹" 운운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을 편들어 온 윤석열 정부는, 정작 푸틴의 억압

으로 고통받는 러시아인 청년들을 냉혹하게 외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확전을 낳을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노력에 반대해야 한다. 인천공항에 수개월간 억류돼 있다가 겨우 입국한 러시아인 난민 A 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 국가인데 서로 총을 겨눠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월 19일 자

동시에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인 난민을 환영해야 한다.

▶ 15면으로 이어짐